

# 지방의정 브리프

##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

윤태웅(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)



### I. 문제 제기

-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비판·견제·감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
  -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상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, 예산심의·확정 및 결산승인,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·가입금 부과 및 징수, 서류제출 요구,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서권 발동 등이 있음
  - 또한, 개별 법령상 지방세 감면 및 지방채 발행, 계속비 사업, 채무부담행위,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변경, 지방공기업 예산안 의결 등이 있음
- 이에 따라,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, 청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

### II. 검토 방향

- 지방의회는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3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,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
-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, 전문성은 지방의회의 전문위원, 관계공무원, 외부전문가, 시민사회 등의 협조와 공정화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,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 강화를 중심으로 겸직금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### III. 관계 법령 및 겸직신고제도 현황

-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에서는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될 수 없고, 설사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후보자 등록 등 당선된 경우에도 겸직위반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
## 〈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직 현황〉

지방자치법	국회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겸직금지 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현재재판관, 선관위원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지방공사</li> </ul> </li> <li>• 공단 임직원, 각 협동조합 임직원 등 9개 직 열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휴직</li> </ul> </li> <li>• 겸직신고 : 위 각 호의 직을 제외한 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무총리, 국무위원 이외의 겸직금지</li> <li>• 예외적 허용 : 공익 목적의 명예직,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, 정당의 직</li> <li>• 겸직신고 : 당선전, 임기 중 공익 목적의 명예직,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직</li> </ul>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(겸직 등 금지)~제36조(의원의 의무)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직 외에 다른 직 겸직시 신고 의무화(§35③), 소관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금지(§35⑥), 청렴의 의무(§36②)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제86조(징계의 사유)~제89조(징계에 관한 회의규칙)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(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등) 및 종류(경고, 사과, 30일 이내 출석정지, 제명 등)를 규정하고 있음
- 「지방계약법」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①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불가, ②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,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 체결 불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

## IV. 문제점 및 개선방안 1)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겸직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
  - (현 행)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겸하고 있거나,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실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
  - (문제점) 이 경우, 실제 겸직 사실이 없는 지방의회의원과 겸직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이 구분될 수 없으며,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‘허위신고’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‘미신고’로 처리되는 한계가 존재함
  - (개선안) 겸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겸직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    - ▶ (사례)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겸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의회의원들이 겸직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 등 금지위반 징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
  - (현 행)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의무와 지방의회의장의 소속 의원에 대한 겸직 사임 권고, 영리활동 관여 금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
  - (문제점) 동법 제86조에서는 “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여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
  - (개선안)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현황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조례 또는 규칙에 겸직과 관련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양태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, 각 위반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겸직 관련 제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

〈예시 :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〉

위반유형	징계유형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공개회의에서의 경고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	공개회의에서의 경고,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겸하고 있는 다른 직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공개회의에서의 사과, 30일 이내의 출석정지, 제명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임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그 겸한 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30일 이내의 출석정지, 제명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였으나 같은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공개회의에서의 경고,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30일 이내의 출석정지, 제명

-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될 때 서약하는 선서문의 내용에 ‘소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것’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도록 하여,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청렴도 향상 장려를 통한 의정활동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

- (예 시) ○○○○의회 회의규칙 개정(안)

- ▶ (현 행) 제○조(선서)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
- ▶ (개선안) 제○조(선서)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

1) 2019년 7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

내용문의 : 윤태웅(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, bigbear503@hanmail.net)